

전주시, 고교 무상급식비 35% 지원

초·중학생 보다 10% 추가 부담... 2019학년도에는 합리적인 예산분담비율 재조정 방침

전주시가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35%를 지원키로 했다. 초·중학생 무상급식의 경우 전주시가 전체의 25%를 지원하고 있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35%를 부담키로 하면서 1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시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내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확대되는 전주시 지역 학교 무상급식 관련 예산 증액 35%를 전주시가 부담하는 예산안이 전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됨에 따라 고등학교 2만 1,944명을 포함한 전주시 학생 7만 4,000여명(초·중학생 5만4,000여명)이 무상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급식비용의 부담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게 됐으며, 학부모의 경우 가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시는 최악의 경기불황이 지속되는데다 정부의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등 갈수록 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교육복지 차원에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가로 부담키로 했다.

하지만, 시는 지방자치의 권고에 따라 오는 2019학년도에 전북도, 전북도교육청과 협의해 무상급식을 위한 합리적인 예산분담비율을 재조정



전주시가 20일 전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전주시청 청년과 청년정책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청년 공청회

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19일 마무리된 전주시의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향후 고교 무상급식 분담비율을 초·중학교 급식분담률과 같은 25%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앞서, 전북도의회도 예산심의 과정

에서 오는 2019년 예산 편성 시 전북도교육청과 전주시 등 도내 시·군과 함께 협의해 고교무상급식 지원예산 분담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부대 의견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라기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도 “학교 무상급식이 내년부터는 고등학

교까지 확대되면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이고 미래 주역인 학생들의 먹거리 복지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내년 예산 1조 5258억원 의결

시의회 2017년 의정활동 마감

전주시의회가 20일 제346회 정례회를 끝으로 2017년도 의정활동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일반회계 1조 3,258억 원, 특별회계 1,999억 원, 총 1조 5,258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올해 임시회, 정례회 등 10차례 회의에서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총 2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시장 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39건의 시정질문과 77건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시정의 올바른 방향과

청사진을 제시하는 데 노력했다. 또한, 지난 3월 혁신도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요구했으며 6월에는 골목 상권을 위협하고 있는 이마트의 노브랜드 입점 철거를 촉구하며 지역 영세상인 보호에 앞장서 왔다.

김명지 의장은 폐회사에서 “변화와 성장의 물결 속에서 남부 새도시(日新又日新)의 자세로 지방자치의 진정한 의미를 실현하고 지역 성장을 선도하는 전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남부시장 새벽시장 주변 정리 나선다

전주시 완산구는 장기간 물감적치 및 천변 시설물 파손 등으로 인한 하천오염 문제를 개선하고자 남부시장 인근에서 운영되고 있는 새벽시장에 대한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매곡교 인근 지역에서는 새벽 시간대에 도깨비 시장이 형성돼 100여 명의 상인이 싱싱한 채소 등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하천 쓰레기 불법 투기와 농수산물 장기 적치행위가 만연한 데다 ‘고향의 강 사업구간’ 조성식에 스프

레이로 자리 표시를 하는 등 불법 행위들이 지속해서 발생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완산구는 새벽시장 운영시간 준수 및 하천변 적치 행위 금지 등의 홍보와 계도 및 일일 순찰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새벽시장 인근의 불법 주차 문제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매곡교 주변 상습 정체구역(약 170m)구간에 도로 규제봉을 설치하는 등 시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김민근 기자

여제자 추행·장학금 갈취 60대 교수 실형

여제자를 추행한 것도 모자라 제자들이 받은 장학금까지 갈취한 60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 정윤현 판사는 강제추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 모 대학교 교수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A씨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자신의 연구실로 여제자 B(20)씨를 불러낸 뒤 함께 여행을 가자며 이야기를 하던 중 “다리에 살이 찼다”며 B씨의 허벅지를 갑자기 두 손으로 움켜쥐며 “탱탱하네”라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결별을 요구하던 내연녀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신행위”에 대한 대가를 맞보게 해주겠다”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19차례에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장학금을 받은 제자가 전화를 걸어 고마움을 표시하자 “원래 나에게 200만원을 다 줘야 하는데 150만원만 가져오라”면서 1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학점이 안 나갈 것이다. 나한테 잘 보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 졸업 안 시킬 수도 있어”라고 말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이밖에도 A씨는 장학금 300만원을 받게 된 또 다른 제자로부터 “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양보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자 제자를 속여 3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대학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의 돈을 갈취하거나 편취했고 강제추행까지 했다”며 “또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다수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죄책이 가법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삼민 기자

‘100년 후 전주의 보물’ 될 미래유산 50건 선정

역사·정체성·시민들 애환과 추억 담긴 유·무형 문화자산들

동화농민군전주임성비와 삼천동 막걸리골목, 노송동 천사 등 전주의 역사와 정체성, 시민들의 기억이 오롯이 담긴 유·무형 문화자산들이 100년 후 전주의 보물이 될 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

전주시는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건의 전주시 미래유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미래유산은 근·현대 배경으로 전주만이 가지고 있는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과 인물, 이야기가 담긴 모든 유·무형의 가치 있는 자산을 의미하며, 시

는 역사문화도시 전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해 후손들에게 보물로 물려줄 예정이다.

선정된 미래유산을 살펴보면 △충경사 △동화농민군전주임성비 △곤지산 조륙바위 △전주역 터 △미원탑 터 △장재마을 △남부시장 △도래내 전통시장 △삼천동 막걸리골목 △한지 제조 기술 △고미술거리 △전주동물원 △약령시거리 △행차마을 △어은쌍다리 △전주종합경기장 △호남제일문 △문화촌 공공건축물 △서학동 예술마을 △노송동

천사 등 공공장소와 공공자산, 무형유산 등 20건이 포함됐다.

또한, 대장간과 서점 등 민간이 소유한 건물 30곳도 미래유산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민간소유 30건의 미래유산에 대해서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후 미래유산으로 확정하고, 지정된 미래유산에는 표식과 안내판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미래유산 정보를 제공하고 알리는 전주시 미래유산 홈페이지와 시민·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미래유산 활용 프로그램 등도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부터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미래유산 기초조사 대상에 대한 전문가 조사도 실시했다.

시는 또 지난 4월에는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전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를 구성했다.

역사, 생활, 도시, 문화예술 4개 분과로 구성된 전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는 세부선정기준을 마련, 분과별로 전문가조사를 마친 자료를 심의하였고, 현장답사를 통해 위원회 의견을 모았다. /김민근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